쇠고기 정국 정치권 대격돌

한나라 "조건부 재협상" 민주·민노 "무효화 특별법"

與 "유언비어 중단" 野 "굴욕 협상 규명"

오늘 국회 청문회 개최 … 최대 고비 될 듯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격돌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6일 유언비어의 정략적 활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조건부 재협상 카드'로 야권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반해 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쇠고기 재협상 관철을 위한 특별법, 국회 결의안 추진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7일에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는 정운천 농수산식품부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쇠고기 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일단 민주당 등 야권은 청문회를 통해 ▲졸속·굴욕 협상 배경 및 과정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축산농가 대책 ▲쇠고기협상 책임 소재 ▲협상 무효화 및 재협상 방안 등을 집중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민주당과 민노당은 청문회 개최 이후 '광우병 쇠고기 수입 특별법안'(가칭)을 국회에 발의, 정국의 주도권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최인기 정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정부가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 미 도축장 및 수출작업장 특별검역단 파견 등의 내용은 미봉책"이라며 "쇠고기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과의 협상을 무효화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유선진당은 국제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국제협상을 부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국내법과 국제법이 충돌되고 통상마찰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어 과연 특별법 제정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136석의 민주당과 6석의 민노당이 특별법 처리에 필요한 과반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9석의 선진당의 의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쇠고기 협상 논란은 7일 국회 청문회에 이어 8~9일 국회 대정부 질문, 13~14일 국회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청문회로 이어지면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5월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 정치권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이 같은 야당의 공세에 맞서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발생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거나 실제 광우병이 발생했을 경우 수입 및 검역조건에 대해 재협상 가능성을 검토키로 하는 한편 쇠고기 원산지표시도 확대키로 했다.

강재섭 대표는 협의회에서 여야와 정부, 전문가, 농민,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쇠고기 검증을 위한 범국민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쇠고기 수입 재협상, 수입금지 특별법을 주장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잘못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을 덮으려고 하지 말고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쇠고기 파문 관련 정치 일정

7일	'쇠고기 청문회'(주관: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8일	국회 대정부 질문(정치·통일·외교·안보분야)
	민주당, '쇠고기 협상 무효화 특별법' 발의
9일	국회 대정부 질문(경제·사회·교육·문화분야)
13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청문회(14일까지 계속)

오늘 쇠고기 청문회… 핵심 쟁점은

검역주권 포기 논란 거셀듯

'졸속협상' 정상회담 선물 아닌가

광우병 발병 위험 여부 공방도

오는 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리는 '쇠고기 청문회'에서는 한미 쇠고기 합의문을 토대로 검역주권 훼손, 미국 광우병 위험, 한미정상회담 선물 여부 등을 쟁점으로 부각시킬 전망이다.

◇**검역 주권 포기 논란**=야당은 이번 합의에 따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다시 발생해도 우리가 즉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검역중단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계획이다. 이 부분은 일반 국민 역시 가장 의아하게 생각하는 대목으로, '굴욕 협상' 주장의 주요 근거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의 핵심인 소 등 반추동물을 사료로 만들어 다시 소에 먹이지 못하게 막는 것은 이미 지난 97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에서 1억 마리의 소가 사육되고 있으나 2006년 이후 광우병 발생이 없었다는 점 ▲재미교포를 비롯해 많은 미국인들이 미국 내에서 생산된 쇠고기를 먹고 있다는 점 등도 강조할 예정이다.

◇**정상회담 선물이냐 아니냐**=야당은 이번 쇠고기 협상이 순수하게 검역 차원이 아니라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 양국 간 통상·외교 관계를 고려해 서둘러 타결됐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에 열릴 한미정상회담의 선물로 주기 위해 18일 이전에 협상을 마무리하다 보니 미국 측의 주장을 다 받아들인 것이란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과 정부 측은 미국이 지난 5월 OIE로부터 받은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토대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측 수출검역증명서상 연령표시를 의무 사항으로 넣지 않아 뇌·척수·등뼈 등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상대적으로 광우병 위험이 큰 '30개월 이상' 소의 것이 아님을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지적될 전망이다.

◇**미국 광우병 위험 여부**=야당은 미국이 지난달 말 공포한 '동물성 사료' 강화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공격할 예정이다. 현재 EU는 12개월령 이상 소의 두개골·척수·척추·내장 등을 무조건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SRM은 물론이고 그외 부분도 폐기하는 것은 광우병 위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부위가 동물 사료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이 시행하겠다고 밝힌 조치는 뇌와 척수, 단 두 가지 종류의 SRM만, 그것도 30개월 이상 소에게서 나온 것만 사료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더욱이 '공포' 시점을 기준으로 전면 개방을 약속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공포 내용대로 12개월 뒤에 정확히 이 강화 조치가 시행된다 해도 1년 동안 우리 국민은 동물성 사료 조치가 불완전한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야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우병 위험부위는 30개월 미만도 안돼"

김성훈·박홍수 전 농림장관 美 쇠고기 수입 비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농림부 장관을 역임했던 김성훈 상지대 총장, 박홍수 통합민주당 사무총장 등이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김성훈 상지대 총장은 6일 자신의 홈페이지(www.profksh.net)를 통해 "광우병원체 프리온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부위는 하필이면 우리 국민이 가장 즐겨먹는 요리의 원료로 사용되는 부위들"이라며 "골과 척수, 뼈 등 광우병 위험부위는 30개월 미만도 절대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미국도 캐나다가 30개월 넘은 쇠고기를 팔았다고 난리법석을 피운 적이 있다"며 "미국은 광우병에 대한 우려 때문에 (광우병이 발생한) 영국에서 6개월 이상 살다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헌혈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앞서 지난 4일 쇠고기 협상 이후 위축된 한우농가를 돕고 광우병 의심 쇠고기에 대한 학생들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 대학 내 모든 식당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지대는 6개 구내식당에 '미국산 쇠고기를 쓰지 않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통합민주당 내에서 '쇠고기 협상무효화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홍수 사무총장 역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번 쇠고기 수입협상에서 '검역주권'을 잃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총장은 "미국에서의 광우병 재발시 검역중단에서 수입중단까지 단계적 안전장치를 포기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참여정부 시절 정부의 미 쇠고기 수입협상은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로 한정하고 그 수입대상을 미국내 소비 부위로 한정한다는 것이 마지노선이었다"고 덧붙였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여권내 '쇠고기 자성론' 부각

박근혜 "쇠고기 재협상 하라"

한나라당 내에서 미국산 쇠고기 협상 및 결과에 대한 대처가 미흡해 정국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는 자성론이 일고 있다. 광우병 우려가 인터넷 등에서 확산되고 촛불집회로 이어지는 등 '쇠고기 민심'이 들끓고, '반미. 반정부' 여론으로 비화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강재섭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에서는 뼈아픈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강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쇠고기 수입 및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과 관련, 국민의 불안이 이토록 커지게 된 데는 대국민 홍보와 설득이 부족했던 점이 크다"면서 "우리도 반성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야권의 쇠고기 재협상 및 특별법 제정 주장을 일축했지만 "주변국의 협상과정 등을 보면서 '만약 우리에게만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추가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분명한 방침을 마련해놓는 것이 좋겠다"며 수입위생 조건과 관련한 추가협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박근혜 전 대표도 이날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결정을 강도높게 질타하면서 "재협상 밖에 해법이 없다면 재협상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